

투데이 칼럼

민감국가 지정 문제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을 지정한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했다.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1월 초 이뤄진 조치다. 한미 간 에너지 기술 협력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가 원인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하나의 촉발 사건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2023년 워싱턴 선언에 이어 캠프 데이비드 회동까지 이끌어내며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강조했던 바이든 행정부다. 하지만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 1월, 한국을 이른바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나라라고 적혀 있다. 이는 '요주의 대상'이라는 뜻이다. 국가 안보와 핵비확산, 지역 불안정이나 경제안보 위협 등을 지정 사유로 꼽고 있다. 민감국가 목록에는 약 25개국 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국가 목록은 심각성에 따라 총 세 단계로 분류된다. 현재 북한, 시리아, 이란 등은 테

러지원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는 위험국가로 분류돼 있으며, 한국은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포함됐다. 이중 동맹국은 한국이 유일하다. 미 에너지부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AI와 원자력, 양자 등 각종 첨단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도 핵심 과학기술 협력 대상국인데, 민감국가에 속하면 일단 '45일'의 제약이 생긴다. 한국인 연구자들이 미국 핵안보국 산하 연구소나 시설을 방문하거나 정보에 접근하려면 최소 45일 전 요청서를 내야한다. 한국 아니면 협력이 안 된다면 몰라도, 정보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신고를 해야 된다면 그런 협력을 쉽게 하려고 하겠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일각에선 한미가 공동 연구 중인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

술 개발이나 '한국 원자로 수출'까지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민감국가 중에서도 단계가 낮은 '기타 지정국가'에 속해 있어, 제약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우리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설사 한국이 민감국가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아주 최첨단 기술 부분 그리고 이중용도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국가 목록에 있든 없든 미국이 앞으로는 추가적인 감시를 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당초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던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 에너지부가 수출 통제 대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가지

고 한국행 비행기에 타려던 연구소 직원을 해고한 사실도 최근 확인됐다. 그러나 더 큰 배경은 아마 국내의 지난 수년간 목소리가 높았던 핵무장론이라는 지적이다. 국내의 유력 정치인들이 그런 발언을 한다거나 원자력 전문가가 '한국은 6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민감국가에 포함됐다 해제된 적이 있다. 특히 1993년에는 미국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을 설명하고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뒤에야 이듬해 민감국가에서 제외됐다. 핵무장 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제를 해야 된다. 우리처럼 이렇게 요란하게 떠들면서 핵무장을 추진하는 나라는 없다. 실력을 갖출 때까지 참아야 한다. 북한은 끝까지 핵무장 안 한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갖춘 다음에 실험을 하면서 발표를 했다. 일본은 핵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받지만 핵무장 안 한다고 얘기한다. 비핵 3원칙을 정확하게 고수하고 지금까지 그 정책을 지켜 왔다.

정복규
논설위원

사설

극우 맷글 실태

여론 조작이 갈수록 '접입가경(漸入佳境)'이다. 이런 상황은 최근 '극우추적단'이 3만명 규모 '신남성연대'의 맷글 부대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2025년 4월 4일 파면)을 지지하는 맷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하는 '맷글부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15명이 두 달 간 1만500여 개의 맷글을 작성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명당 700개의 맷글을 작성한 셈이다. 한 가담자는 1700개를 작성할 정도다. '극우추적단'은 '신남성연대' 회원 3만여 명이 입장해 있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여론조작을 지시한 기사 41건을 전수 조사했다. 이들은 맷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율이 80% 이상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계란을 맞은 사건은 자작극 △탄핵 촉구 집회에 중국인들이 일방을 받고 참여하는 것 △홍장원 전 국가정

보원 1차장의 비상계엄 관련 맷글은 거짓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주장을 유포하고 있다. 가장 많은 맷글을 게시한 15명의 경우 지난 1월 1일부터 3월 19일까지 80여 일 동안 총 1만506개의 맷글을 작성했다. 평균 700개의 맷글을 작성한 셈이다. 이 중 혼자서 1717개, 1544개의 맷글을 작성한 가담자도 있었다. 맷글부대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맷글에는 추천을,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맷글에는 비추천을 눌러 기사 상단에 노출되는 맷글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보이게끔 조작하고 있다. '극우추적단'은 여론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맷글을 많이 단 상위 35명에 대해서는 공중합작죄, 명예훼손, 내란선전죄 등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

토지허가제 후폭풍

최근 서울시장을 보좌해온 핵심인사인 민생소통특보와 정책특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지정 혼선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잠실·삼성·대치·정답동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에 따른 영향 분석과 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시장에게 전했다. 핵심 참모들의 사의 표명은 토허제 논란이 시장의 대선 가도에 큰 정치적 약재임을 뜻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면서 '집값 상승 우려'를 일축한 바 있다. 시장도 "토지거래허가제는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당히 초헌법적인 제한으로 상시화 할 수 없는 비상조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해제 여부를 검토해 왔다"고 했다. 또한 "작년 연말 들어서 거래가 30% 정도 줄었고 올해 1월엔 부동산 거래가 아주 줄

고 하향 안정기에 들어서며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봤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오판이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후 강남 3구의 겹투자 의심 거래가 2배 이상 늘었다. 집값은 강남 3구만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결국 35일 만에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는 번복됐고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갑작스레 바뀐 정책에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은 매우 치명적인 결과다. 특히 집값 이상 상승 가능성에도 조기 대선을 겨냥해 강남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토허제를 해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토허제 논란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강남 지역은 본래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했던 곳인데 이번 사태를 통해 표심이 떠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트럼프 “이것이 트럼프 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취재진에게 500만 달러(약 73억 원) 상당의 '골드 카드'를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얼굴이 새겨진 골드 카드를 들고 "이것이 골드 카드, 트럼프 카드"라고 소개했다.

대피령에 피란길 오른 쉐하이야 주민들



지난 3일(현지 시간) 가자지구 쉐하야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군의 대피령에 따라 대피하고 있다. 가자지구에서 2주째 이스라엘군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팔레스타인 난민 28만 명이 새로 발생했다고 유엔 구호 기관이 발표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